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재책위원회 /
인권연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12. 9.(월) 16:30
문 의 조영민 국장(02-784-6471)
 차진영 보좌관(02-784-9160)
불 임 간담회 홍보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검찰개혁!
국민에 총칼 겨눈 비극의 역사 끝장내자!**

12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한준호)와 인권연대가 공동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처벌과 검찰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에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이지은 사검독위 위원(민주당 마포갑지역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발제자는 따로 없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제문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12월 3일(화) 밤 10시 27분, 내란수괴 윤석열이 불법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항과 발 빠른 국회의 대응으로 150분 만에 계엄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여섯 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내란 상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100만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절절히 호소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은 탄핵을 거부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편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우선이다”며 자신이 국정을 장악한 듯 경거망동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자신이 대통령인 듯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권한도 없는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내란 주모자 김용현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이고 국기 문란입니다.

윤석열이 시작한 내란을 한동훈-한덕수-검찰이 합작으로 2차 내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모두 내란의 공범으로 국정과 수사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의 국정 장악 음모를 차단하고, 국기 문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보다 빠른 구속을 통한 직무 정지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북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통한 국지전을 도발하려 했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김어준, 김명수, 권순일 등 여러 인물을 체포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불법 사실이 꼬리를 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담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처럼 혼란의 상황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비상계엄의 법리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윤석열 처벌과 검찰개혁 방안을 찾고 국민에게 총칼 겨눈 비극의 역사를 끝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사검독위 내란수괴 윤석열 처벌과 검찰개혁을 위한 토론회 홍보물

더불어
민주당

윤석열 내란죄 처벌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국민에게 총 뿌리 겨는
비극의 역사 끝장내자!

일 시 | 2024. **12. 10**(화) 오후 1시30분
장 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본청 202호)

 온라인 생중계 : 오마이tv, 인권연대tv 등

- 사전행사

개 회 : 전 현 희, 한 준 호 사검독위원장(최고위원)
축 사 : 참석 국회의원 등
- 모두발언

좌 장 : 하 태 훈 고려대 명예교수(前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토론

윤석열 내란죄 처벌과 검찰개혁 방안
김 종 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백 태 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서 보 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오 창 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인권운동가)
이 재 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
김 규 원 한겨레21 선임기자
이 지 은 사검독위 위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지역위원장)
- 자유토론

사법정의·검독위 위원, 참석자 등

문 의 | 국회의원 김문수(사검독위 제보센터장) 02-784-6471

주 최 | 사법정의·검찰독재대책위 / 인권연대